

# “석산 연장 허가 즉각 취소·원상복구하라”

### 고창군 성송면 석산반대대책위원회·전북환경운동연합, 축복건설 석산 연장허가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입장 발표

고창군 성송면 석산반대대책위원회·전북환경운동연합은 7일 오전, 고창군청 브리핑룸에서 축복건설 석산 연장허가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은 △법령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채취 허가면적을 정정하고 허가면적 확대, △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 지연 등 관리·감독 소홀 등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하고, 토석채취허가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 및 면적확대 변경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검토하라는 등 고창군의 석산 인허가 행정이 매우 심각한 법령 위반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에게 큰 손해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고창군 성송면 송산마을과 암차마을 주민들은 1992년부터 32년째 운영 중인 석산 사업장의 발파와 채석, 파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더는 견딜 수 없었던 마을주민들은 2017년 4월부터 석산 개발사업 연장 반대 활동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축복건설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석을 채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허가 불법 채석, 복귀지역

무단 사용(훼손) 혐의로 축복건설을 고창경찰서에 고발했다. 2017년 6월, 고발 사건을 조사한 고창경찰서는 축복건설이 2012년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면적과 실제로 채취한 면적이 달라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을 고창군에 통보했다. 이후, 축복건설 대표이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은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외래 단순 오류나 오기였다 는 축복건설의 진술만 확인하고 덮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산개발 반대추진위는 축복건설과 “2022년 4월 30일까지 개발을 종료하고 개발 구역 원상복구까지 완료”한다는 석산 개발연장 합의를 공증한 후 반대 활동을 종료하였다.

하지만, 축복건설은 석산 사업 면적 정정과 변경 허가, 기간 연장 허가를 추진했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축복건설은 도지사 아닌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 도지사 허가 기준인 10만㎡에 4㎡ 못 미치는 9만9,996㎡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허가면적을 넘겨 불법으로 토석 채취 사업을 운영하다가 고발당했고,

고창군도 경찰서의 통보로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고창군은 축복건설이 불법으로 채석한 훼손지를 면적 정정이라는 이유로 합법화 시켜주고, 다시 이 면적을 기준으로 20% 이내에서 1회 가능한 변경 허가를 내줬다.

축복건설은 18% 확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결과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20% 이내를 넘어 37.2% 더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도독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묘사하 도독질을 더 하라고 허가를 내 준 꼴이다.

담당 공무원은 고창군이 스스로 정정해야 할 명백한 면적 산정의 기재 오류나 오기가 아닌데도, 산립청에 자문한 결과 변경 허가가 가능하다는 전임자의 말만 믿고 직접 법을 자문이나 산림청 질의를 검토하지 않았다.

이후 고창군은 전임자, 담당자, 부서 과장 모두 한통속이 되어 ‘오류 정정을 통한 현행화’를 추진했고, 군조정위원회, 전북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이는 불법을 합법화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창군의 행정 처분 미 이행이 불거지자, 경찰서의 통보로 불법 행위를 알게된 지 3년 반이 지난 2020년 11월에서야 슬그머니 토석 채취 중지 1개월 처분을 통지했다. 송방망이 처분에 불과한 1개월의 영업 정지마저도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고

창군 관공사에 납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축복건설의 면적 정정 및 변경 허가 즉각 취소, 불법 개발지에 대한 원상 복구, 불법 특혜 이익 환수, 영업정지 기간 무단 반출에 대한 추가 고발 실시 △석산 불법 묵인 및 연장 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 △난개발 시정 입지에 대한 갈등 예방 등을 위해 고창군 환경 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할 것 등이다.

이에 고창군은 감사원의 ‘지역 토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2012~2022년)’ 감사결과에 “경히 수용하겠다”며 “업체의 사법처리와 담당 공무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나,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 및 면적 확대 변경허가 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감사원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 일부에서 제기된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고창군은 지역내 이해관계가 첨예한 석산개발 관련하여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로 주민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김옥기 기자

## 글쓰기 특화 프로그램 ‘풍성’

### 완산도서관, 재개관 기념 12일부터 운영

출판문화도시 전주의 거점 공간인 전주시립 완산도서관이 재개관을 기념해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완산도서관은 오는 12일부터 △글과 그림이 함께하는 인생극장 △(DIY 출판)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반려동물 달력 만들기 등 다양한 글쓰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먼저 ‘글과 그림이 함께하는 인생극장’은 방학을 맞은 대학생과 60대 이상 시민들이 만나는 세대 통합 글쓰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 시민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면, 문예창작과 대학생들이 글을 쓰고 미술과 학생들이 그림을 그려 한 권의 동화책으로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화책은 글과 원화를 전시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김정배·이용석 원광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또한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간직해온 자신의 일기와

소설, 시 등을 완산도서관의 출판 기계를 활용해 더미북(가제본)으로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신의 일고를 직접 교정하고, 표지를 만들어 보면서 그동안 숨어있던 자신의 이야기를 만나고 세상 밖으로 꺼내어 볼 수 있다.

끝으로 ‘반려동물 달력만들기’ 프로그램은 방학을 맞은 가족들이 함께 반려동물 사진을 찍고 편집하여 나만의 달력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8월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 또는 완산도서관 직접 방문에 신청할 수 있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지난 7월 29일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관한 완산도서관에서 하반기에는 다양한 글쓰기 특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정부 3대 특구 선정으로 전주의 큰 꿈 ‘가속화’

###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지방시대위원회 3대 특구 모두 선정

전주시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3대 특구에 모두 선정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미래인재 양성,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 등 전주의 큰 꿈을 키워갈 새로운 동력을 갖게 됐다.

시는 지난해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 지정에 이어 올 한해 기회발전특구(6월)와 교육발전특구(7월 30일)에 연이어 선정돼 지방시대위원회의 4대 특구 중 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도심융합특구를 제외한 모든 특구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4대 특구는 기업 유치부터 일자리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해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4대 특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



전주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정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로, 수도권에서는 받을 수 없는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가 과격적으로 적용된다.

시는 주력산업인 탄소산업을 기반으

로 친환경복합산업단지 3-1단계와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등 약 99만㎡(약 30만 평)이 탄소융복합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만큼, 액체기업의 투자기간 동안 6231명의 취업유발효과, 838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3781억 원의 부가

가치 유발효과 등의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선정된 교육발전특구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올해부터 3년간 국비 70억 원 등 총 140억 원을 투자해 지역인재 양성세력 청년 정착 등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말 선정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대해서는 올 연말 본 지정을 앞두고 현재 예비도시로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의 이번 3대 특구 지정은 강한 경제를 기반으로 전라도의 수도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 시에게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3대 특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정부 지방시대의 성공모델이자,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 덕진구 사랑의올타리 봉사단, 반찬 나눔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한병삼)는 7일 덕진구 사랑의올타리 봉사단(회장 이서희) 주관으로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 두 배! 영양 만점! 행복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덕진구 사랑의올타리 봉사단은 말복을 앞두고 외부 활동이 적은 소외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가족의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삼계탕,

무침 등 정성껏 만들어 직접 전달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 효자2동 지사협, 사랑애 밑반찬 나눔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동장 박시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옥자)는 7일 협의체 특화사업인 ‘사랑애 밑반찬 나눔’ 행사를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20세대를 대상으로 정성과 영양이 풍부 담긴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효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직접 준비한

밑반찬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김영태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